



산업안전법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며

본질적이며 거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

이제는 산업안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산 소재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4명에 이르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하철 역사와 조선사업장에서의 하청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에 따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안전 당국의 사과만 반복되고 있을 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짐하지만, 여전히 산업재해의 상처는 번번이 덧나고만 있을 뿐이다. 부끄럽지만 그게 엄연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우리의 현실이다. 버스에서 산재가 나면, 버스에 대한 대책만 세우고 화물차는 그대로 두는 식의 임기응변은 곤란하다. 본질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그저 몇몇 사업주나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감성적 방식도 지양되어야 한다.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수립에만 급급해서도 안 된다. 본질적이며 거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 이제는 산업안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다.

첫째, 산업안전은 ‘노사 간 유불리’를 놓고 따질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때 산업재해는 노동자만의 불행일 뿐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주나 국가에도 너무나 큰 재앙이다. 우리나라 통계수치만 봐도 자명하다.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가 무려 18조를 넘어섰다. 이쯤 되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가장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기능의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노사 어느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에 관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산업안전에 관한 한 ‘계약의 틀’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차원에서 벗어나, 산업재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저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사용자’인가에만 매달려 왔다.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제도를 다른 여타의 노동법과 동일한 차원에서 보아왔던 탓이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적 비난과 오명도 실은 여기에 원인이 있었다. 지금은 달라야 한다.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노동자의 소속을 따지는 일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분명히 해야 한다. 산업안전에 관한 한 사업장 내 산업재해의 위험 앞에서, 소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청 소속이든, 하청 소속이든 상관 없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생산공동체 일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다.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산업안전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산업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제재는 물론이고, 사업장의 경쟁력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초래될 기업의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향후 기업 활동에도 엄청난 장애가 초래된다. 따지고 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생산성 제고 전략’이요, 가장 중요한 ‘투자’인 셈이다. 오늘날 무분별한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비용절감이다. 판단컨대 외주화의 추세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주화를 통해 산업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비용까지 절감시킬 수는 없다. 도급이 위험을 가중시켰다면, 산안비용은

그만큼 높아지도록 하는 게 순리다.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시키거나, 전문역량을 갖춘 수급업체에게만 맡기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산업안전에 관한 한 도급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비용가중 요인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넷째, 산업안전에 관하여 사업주가 '문외한'이어도 상관없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사업주 스스로가 산업안전과 보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독일 산안법 상의 기본 원칙에 새삼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독일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존의 설비나 재료가 안전하더라도 더 안전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선택하도록 기본 원칙을 구축해 두고 있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업안전 그 자체에 대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라면 누구나 산업안전 그 자체의 산업적 변화를 늘 추적하고 새로운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테니 말이다. 따지고 보면 산업안전에 관한 한 충분한 것은 없다. 항상 더 안전한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필자의 부친이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연로하셨던 그를 보내는 일조차도 애통하고 힘들었다. 하물며 건강했던 부모나 자식을 직장에서 갑자기 잃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비통함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틀림없다. 단언컨대 직장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양보해서도 안 된다. 부디 산업안전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요, 성장전략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